

野, 이달 첫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與 표결 불참

추경호 “지난 국회서 폐기·정쟁법안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적 논의해야”
이해식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경제계 “尹 거부권 행사해달라”
노동 전문가 “與·재계, 선동 멈춰야”

국회가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석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밟았으나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막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

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가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후 5분 자유 발언에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며 “예정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다면 탄핵에 지름길로 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친한체제’ 구축 전념… 與 장악력 강화 시동

김종혁·한지아·신지호·정성국 선임
김상훈 선임 정책위원장 만장일치 추인
당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당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 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요직인 지명직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에 친한계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 정성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선임한 것. 광구택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한 대표를 돕거나 인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하 비서실장, 한 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뉴시스

이 있던 사람으로 채워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대표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 요구 당시 사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구성원 중 유

일한 원외인사이며 현재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 인선으로 국민의힘 최고위는 친한계(한동훈·김상훈·진중오·장동혁·김종혁)가 친윤석열계(추경호·김민진·인요한·김재원)에 앞서는 구조가 됐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으며, 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대비해 제일 먼저 영입한 ‘1호 인재’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

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훈 선임 정책위원장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또, 한 대표는 당 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한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당 내 경험이 많은 중진들과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당내 장악력 강화 시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6선)과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했으며, 오는 6일엔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 등과의 오찬을 갖고, 오는 8일에는 4선 이상의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백태홍 기자

野 호남 경선 투표율 20% 초반대 ‘저조’

경쟁구도 미형성에 동력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경선 온라인 투표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낮아지면서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4일 각각 25.29%와 23.17%를 기록했다. 3일 열린 전북 지역 경선 순회에선 20.28%로 더 낮았다. 이는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경북 지역 경선(52.23%)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의 전체 누적 투표율은 26.47%로, 충북 지역 순회

경선 이후 종합 집계된 31.94%보다 하락했다.

한준호·민형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약진하고 김민석 후보가 최고위원 1위로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최고위원 선거 관세에는 경쟁이 불붙었지만, 호남이 텃밭 지역임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 “호남 경선 투표 참여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투표율에 대

해 이재명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아 지지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하락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이날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연임을 하는 게 전당대회의 핵심인데, 대표 경선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니(당원들의 투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호남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이 약 83%가 나왔으니 다른 지역에서 90% 이상 나온 것에 비하면 저조하다”며 “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상대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니 투표를 포기한 층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4주 만에 떨어져

긍정 32.8%, 부정 6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주만에 하락해 32.8%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63.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이 같이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2.8%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경기, 대구·경북, 여성, 50대, 학

생, 농림어업, 무직/은퇴/기타에서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가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63.2%로 집계됐다.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남성, 30대, 사무/관리/전문직에서 지난주 대비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의힘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5%,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상승한 36.3%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태홍 기자